

죽산보·승촌보 오늘 ‘운명의 날’

유역물관리위 11차 민간위원회의 열고 처리방안 최종 결정
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 개방 여부 지역민들 관심 집중
농업용수·관광산업 감안 승촌보 탄력적 개방도 논의될 듯

영산강 죽산보(淤) 해체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승촌보를 상시 개방할 것인지 여부도 이날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제 11차 민간위원회의’를 열고 죽산보·승촌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 단위 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환경단체를 비롯한 21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담당자 등 38

명으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특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의 개방·해체 여부에 관한 기초 조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죽산·승촌보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해 2월 영산강에 설치된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의 경우 해체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의 이목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입장이 사실상 지역사회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것인데, 영산강 승촌·죽산보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민간위원들의 5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의견을 조율, 최종 결정하는 자리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된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향후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애초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늦춰지면서 미뤄졌다는 게 환경단체들 시각이다.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된다. 승촌보의 경우 농업용수 부족 및 황포돛배 등 관광산업 차질 등을 감안해 상시 개방이 아닌, 탄력적 개방 형태로 보를 운영하자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21일 성명서를 내고 “보 처리방안에 대한 예측을 벗어나고 있다”며 “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관계자는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라며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죽산보·승촌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 추석엔 가정폭력 줄어들까

광주경찰, 사전 모니터링 등 예방 활동 강화

명절 연휴엔 가정폭력이 도마에 오른다. 가족 간 웃음꽃이 피어야 할 연휴에 사소한 말실수나 잔소리가 도화선이 돼 쌓여온 갈등이 가족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 추석의 경우 코로나19로 연휴기간, 외출이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정 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경찰도 사전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하루 평균 가정폭력 112건 신고건수는 21.8건으로,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신고건수(14.4건)에 비해 51.4% 늘었다.

연휴에는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은 데다 음식 장만 등 명절 노동으로 잠재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가정폭력 표준 질문지인 ‘위험성조사표’를 활용해 긴급입시조치 등을 내리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박정호 광주북부경찰 여성청소년과장은 “북구지역 98곳의 가정폭력 우려가정을 집중적으로 살펴 피해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갈등요인이 있다면 미리 전문상담기관 상담 등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험성적 조작 의혹 남부대 압수수색

광산경찰,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학교측의 시험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남부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산경찰 수사과는 지난 21일 남부대 교무처와 A교수 연구실 등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A교수가 학생들 시험성적을 조

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해 출결사항·시험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수가 중간·기말고사 등에서 학생들 성적을 매기는 과정에 일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풍력발전소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재상정

화순군의회 설명회 개최

화순 군의회가 풍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민 반발 등을 들어 부결시켰던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화순군의회는 22일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선 의원은 “원자력발전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거리제한 기준을 기존 107구 이상 거주하

는 마을에서 2km이내를 800m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내놓았다가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조례안 700m보다 거리제한을 다소 강화했다는 게 의원 설명이다.

조례안은 또 10가구 미만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1.5km 이내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던 데서 500m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뒤 2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25일)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화순지역 11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라 안타깝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가까이 풍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소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3일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방안이 결정된다. 사진은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왼쪽)와 광주시 남구 승촌동 승촌보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들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술) 합니까?”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02호 법정에서 A(48)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물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매 제한 기간에 광주시 남구 모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횡령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판사의 질문에 “그렇진 않습니다”고 했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다들 합니까?

재판장 질문에 고개 숙인 공인중개사…벌금 250만원

다.

류 부장판사는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중개사분들이 있는데 왜 하세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불법 전매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형량을 높여야 하는데

…”라고 했다.

법정 내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알선하거나 전매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류 부장판사는 “300만원(벌금) 이상이면 중개사무소 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물은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10조)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알선 내지 중개 행위가 1차례에 그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류 부장판사는 또 같은 날,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아파트 분양권을 16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